

# 순이익 '정점' 찍은 4대금융... 올해 **정부규제** **저금리** **경기부진** **이자감소** 가시발길

(2019년 12조)

DLF 사태로 비이자이익 위축  
4분기 실적만 보면 수익성 ↓  
“가계대출 성장 더 하락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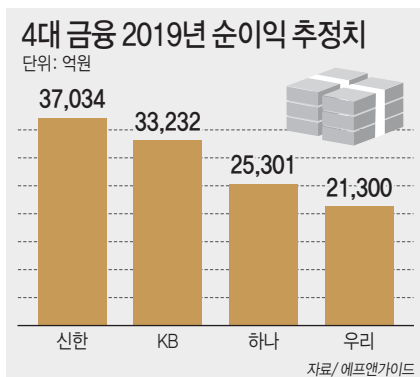
지난해 신한·KB·하나·우리금융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1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8년 처음으로 10조원(지주사 전환 이전 우리은행 포함)을 돌파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게 됐다. 특히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는 연간 순이익이 지난 2017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조원 안팎을 유지했다.

다만 국내 금융지주의 실적은 지난해가 정점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부진과 정부 규제,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 자산을 크게 늘리기 힘든데다 금리인하로 순이자마진(NIM)은 이미 지

난해 4분기부터 하락했다. 이와 함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수수료수익 등 비이자이익 역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신한·KB·하나·우리금융지주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추정치는 11조 6866억원이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은 2018년에 이어 2019년도 나란히 '순이익 3조 클럽'에 들었다.

'리딩뱅크' 경쟁에서는 2년 연속으로 신한지주가 앞설 것으로 예상됐다. 신한지주의 지난해 순이익 추정치는 전년 3조 1983억원 대비 15.8% 증가한 3조 7034억원이다.

KB금융의 지난해 순이익 추정치는 전년 3조 619억원 대비 8.5% 증가한 3조

3232억원이다.

대신증권 박해진 연구원은 "상위권 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이 3조원을 넘어가기 시작했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벌써 3년째 안정적으로 방어 중"이라며 "대손비용이 줄면서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 시중은행들의 대손비용이 과거와 같이 조단위로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추정치는 각각 2조 5301억원, 2조 1300억원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지주사로 전환했으며, 하나금융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수치다.

역대급 실적에도 지난해 금융지주들의 주가는 부진하게 움직였다. 올해부터는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미 연간 기준이 아닌 지난해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악화됐다.

박 연구원은 "은행 기준 지난해 4분기 순이자마진(NIM)이 4~5bp(1bp=0.01%포인트)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뿐만 아니라 4분기 원화대출은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1%대, 국민은행 2%, 그리고 우리은행은 -1%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안심전환대출이 이전됐기 때문에 가계대출 성장은 당초 전망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한·KB·하나·우리금융지주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1조 9186억원이다.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 배상과 지난해 말 희망퇴직 프로그램 시행 규모에 따라 은행별 실적도 일부가 더 발생할 수도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이대훈 NH은행장 비상대응체계 점검  
이대훈 NH농협은행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21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NH통합IT센터를 방문해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농협은행

## 증권계 라임사태 책임 공방

# “대표적 사기행위” vs “판매사도 피해자”

(투자자 법무법인 한누리)

(판매사 법무법인 화우)

### 한누리 라임사태 사기적 범죄행위 규정 화우 투자자 법적 분쟁 장기화 불가피

라임 사태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증권계 '선수'로 불리는 두 로펌이 충돌한다. 법무법인 한누리(왼쪽)와 화우(오른쪽)가 주인공이다. 투자자들과 증권사·은행이 각각의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일부 라임 투자자들은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

### ◆'증권계 다툼' 한누리... 라임도 나섰다

투자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라임사태를 "사기적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 처럼 속여 투자자에게 팔아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의 상환 자금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준비 중이다. 한누리는 "모 펀드 수익률과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했으며 투자대상과 수익률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했다"며 "2018년 11월 무역금융 펀드(플루토 TF-1호)에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새로운 시리즈 펀드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증권계 집단소송 전문로펌으로 명성을 떨쳐왔다. 김상원(87·고등고시 8회) 전 대법관이 자신의 두 아들인 김주현(58·17기), 김주영(55·18기) 대표변호사와 1997년 법률사무소를 세워 2000년 법무법인으로 전환했다.

투자자 집단소송 전문법인으로서 일반적으로 대형로펌이 꺼리는 개인투자자의 집단 소송에서 주로 활약했다. 송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현 변호사(왼쪽)와 송성현 변호사(오른쪽). /한누리



법무법인 화우 이명수 변호사(왼쪽)와 이주용 변호사(오른쪽). /화우

성현 변호사(43·36기)와 박필서 변호사(42·38기)도 증권집단소송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변호사 전원이 증권금융 관련 학회에서도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가다.

대표적으로 20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소송과 로열뱅크 오브 캐나다(RBC) 추가연계증권 소송을 맡았다. 2017년엔 도이치은행을 추가연계증권(ELS) 집단소송에서 꺾었다. RBC와 도이치은행 모두 국내 최대 로펌으로 꼽히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지난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 때도 투자자의 집단소송을 도맡았다. 한 증권계 관계자는 한누리에 대해 "업계 '다윗'이라고 평가하며 '대형 로펌 초호화 변호인단보다 낫다'고 했다."

이번 라임 사건은 송성현 변호사가 진두지휘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부문에서 선도적 관례를 다수 끌어내며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실사가 늦어진다는 것은 손실률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며 "자신의 정확한 손실률을 모르기 때문에 소송 진행에 대한 결단을 망설이고 있는 투자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 ◆화우, 금감원 출신 다수 포진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도 방어전에 나섰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법정다툼을 준비 중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총투자자와프(TRS) 계약을 맺어 3600억

원가량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해 왔다는 부분에서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내 6대 로펌 중 하나로 손꼽히는 화우는 금융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띠고 있다. 화우 금융규제팀에는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가 여러 포진하고 있다. 금감원 1호 법무팀장을 지낸 이명수(65·29기) 경영전담변호사를 비롯해 이주용(48·32기), 정현석(50·33기), 제옥평(46·38기) 변호사 등이 모두 금감원 출신 인사다.

금융감독 기관과 원활한 소통이 강점인 만큼 주로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리했다. 한누리와 정반대라고 볼 수 있다. 금감원 제재에 대한 대응이나 대주주 변경과 인허가에 대한 승인 업무를 비롯해 각종 금융 분쟁을 맡아 왔다.

화우 측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답변하기 힘들다"고 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판매사인 라임자산운용에 속은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투자자들의 법적 분쟁은 장기전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사건이 복잡해 검찰에서도 배당하고 이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vin@

## “영세 가맹점 27만곳 카드 수수료 차액 환급”

(매출액 30억 이하)

### 금융위 우대 가맹점 선정 결과 발표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 가맹점과 온라인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가 낮아진다. 지난해 하반기 창업해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이번엔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27만 가맹점은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올해 상반기 우대 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하반기 창업해 이번에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27만 4000곳에 수수료 차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270만 1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 가맹점은 211만 2000개(75.1%), 중소기업 가맹점은 58만 9000개(21%)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단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가맹점은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 77만 9000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 4000명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이번에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로, 총 21만 2000개 가맹점이다. 여기에는 하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의 차액만큼이다. 신용카드 452억원, 체크카드 127억원 등 총 580억원 규모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의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으로, 단순 평균인 만큼 매출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액은 오는 3월 13일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입금된다. 폐업 등으로 카드대금 지급계좌와 연락처가 변경된 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후 카드사에 필요서류를 구비해 환급신청하면 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